



(03173)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54 (당주동, 세종빌딩 10층)

www.koreatax.org

Tel : 02)736-1940 Fax : 02)736-1931

문서번호 : 제2020 - 1101호

시행일자 : 2020년 11월 일

수 신 :

참 조 :

제 목 : 세무대리인을 위한 '세무조사 동영상' 및 '조세판례 동영상' 교육 안내

1. 귀 사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세무조사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비약적인 발전과 탈세포상금 상한액 인상,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인상, 불합리한 세법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3. 이 같은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의 대처 방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제외하고 모든 실무적인 지침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연맹은 방대한 작업을 통해 세무조사의 비밀을 팩트에 기반해서 최초로 교육영상을 만들었고, 또한 로스쿨을 다니지 않고도 조세판례를 통해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세판례 동영상"도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4. 동영상의 내용은 고수의 불복 및 세무조사 수임업무에 도움을 주고, 세무조사 대응 뿐만 아니라 최신 판례공부를 통해 환급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USB형태로 제공되어 직원교육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5. 아울러 이벤트 기간인 12.31일 안에 '세무조사 동영상'을 구매할 경우 제공되는 '로스쿨 판례강의'는 세무대리인에게 높은 평점을 받은 교육 영상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동영상'과 '조세판례 동영상'을 동시에 구매하는 분께는 '조세문제 해결사례집'을 드립니다. 사례집은 A사가 3년간 최고의 조세전문가들과 함께 세금문제를 해결했던 실제 사례집으로 판례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세무조사 동영상' 및 '조세판례 동영상' 구성

○ 강사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세무조사 동영상		조세판례 동영상	
1. 팩트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A~Z까지 (3h:06)		1. 조세회피행위부인의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 (1h:28)	
2.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2h:00)		2. 상식에 어긋나는 세금 법원의 구제방법 (1h:24)	
3. 세무조사 전략 (1h:54)		3. 신의성실의 원칙 (1h:03)	
4. 탈세포상금 이론과 실제 (1h:24)		4. 비과세관행 (0h:31)	
5. 세무조사 리스크를 방지하는 5가지 방법 (0h:32)		5. 불리하게 세법개정시 신뢰보호 문제와 소급과세 (0h:59)	
6. 금융거래 조사 (0h:54)		6. 개정세법을 개정전 사안에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0h:32)	
총 시간 (9h:50)	가격 66만원 (VAT포함)	총 시간 (5h:17)	가격 55만원 (VAT포함)

‘세무조사 동영상’ 목차

‘세무조사 동영상’ 목차

■ 팩트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A-Z

1. 세무조사 A-Z개요
2. 국세청전산의 보유 정보
 - 가. 국세청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목록
 - 나. 과세자료제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받는 정보
 - 다. FIU로부터 받는 정보
 - 라. 세무공무원의 탈세제보 정보
 - 마. 해외파견직원의 해외 현지수집정보
 - 바. 외국 정부기관과 금융 및 부동산 교환정보
3. 국세청전산의 탈세적발 프로그램
 - 가. 가.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PCI)
 - 나. 부채사후 관리시스템
 - 다. 주식변동관리시스템
 - 라. 주식변동조사와 주식변동기획점검
 - 마. 차명주식통합분석시스템
 - 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 사.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 아. 빅데이터 센터, 개발중인 추진 과제
4. 세무조사의 종류
 - 가. 정기, 비정기조사 구분
 - 나. 조세범칙조사
 - 일반조사와의 구분
 - 진술서, 심문조사
5. 정기세무조사
 - 가. 선정절차, 성실도분석의 구체적인 방법(평가항목, 평가요소, 가중치)
 - 나. 순환조사, 장기미조사, 성실도분석, 무작위조사 비율
 - 다. 소득율과 정기조사와의 관계
 - 라. 우리회사는 언제 나오나?
 - 마 법인 및 개인 정기세무조사 유예, 제외기준
 - 수입금액 100억미만, 15년이상 장기계속사업자, 일자리 창출기업, 모범납세자 등
6. 비정기세무조사
 - 가. 유형별 조사통지서 실제 샘플
 - 나. 지방청 고소득자영업자 선정 과정
 - 다. 국세청 지원에 의한 선정 과정
 - 라. 차명계좌조사사례
 - 마. 검찰에서 이첩된 조사 실제 사례
 - 바. 법인 및 개인 유형별 세무조사 건수
 - 사. 최근의 조사 방향
 - 아.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
7. 통계로 본 세무조사
8. 세무조사 시작 전 조사계획의 수립
 - 가. 조사반 편성, 조사관할
 - 나. 교차 세무조사
 - 다. 조사 1국-4국 업무분담
 - 라. 준비조사
 - 마. 조사전에 검토하고 나오는 항목
9. 세무조사 실시 단계
 - 가. 조사절차 흐름
 - 나. 간편조사, 사무실 간이조사

- 다. 탈세제보 비정기조사 사례
- 라. 공기업 주요적출 내용
- 마. 조사복명, 제출거부 과태료
- 바. 허위문서 감정 방법
- 사. 확인서의 법적효력

10. 조사결과 통지

■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1.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방법
 - 가. 위법한 세무조사 결정의 취소
 -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사 중지
 - 나.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후속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 절차적 하자를 무효로 본 경우
 - 부당이득소송 승소사례
2.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성격
3. 부당한 목적의 세무조사금지
 - 가. 분쟁해결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 세무조사는 위법
 - 나. 정치적조사로 의심되는 사례
4. 중복세무조사 금지
 - 가. 세무조사의 개념
 - 나.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본 경우
 - 주식양도에 대한 해명안내문
 - 서면조사를 세무조사로 본 경우
 - 감사과정에서의 질문조사를 세무조사로 본 경우
 -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요구
 - 다. 중복세무조사로 인정, 부인된 사례
 - 감사원처분요구에 따라 부분조사후 전면조사한 경우
 - 양도세조사후 취득자금의 증여세조사가 가능하지만 일정 범위내에만 가능
 - 법인세조사후 주식변동조사가 가능한지?
 - 업무무관가지급금 사례
 - 라. 중복세무조사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인정한 사례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부정한 사례
 - ①증자대금 납입자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금감원의 통보
 - ②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탈루혐의를 모두 소명한 경우
 - ③법인조사시 대표자 금융계좌를 조사한 경우
 - ④탈세제보에 입금증,통장 등객관적자료가 없어 명백x
 - ⑤탈세제보가 1개 지점에 그쳐 명백x
 - ⑥금융위원회통보자료 명백x
 - 2개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각종 과세 처리를 위한 경우
 - ①감사원이 종전 세무조사자료의 판단을 과세관청과 달리한 경우
 - ②외부기관 과세자료에 새로운 내용이 없어 해당 안됨
-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의 조사

‘세무조사 동영상’ 목차

-부분조사에 관한 국세기본법 신설후 기관례의 적용 여부 검토

5. 정기·수시 선정사유 없이 한 세무조사는 위법
가. 아내 자금출처조사 정당해도 남편의 경우에 수시선정사유 없어 위법
나. 사후검증을 성실히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한 세무조사는 위법
다. 주식양도 누진세율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우회양도한 경우
6.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거래처 현장 확인을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위법
나. 당초 조사기간보다 더 길게 연장한 것은 부당, 연장기간을 축소
7.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판매비를 접대비로 보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법
나. 가공세금계산서 사례(통합조사확대를 세목별조사로 제한)
다. 조사범위확대를 위법하다고 한 납보위 최신 결정사례

■ 세무조사 전략

1. 세무조사전략 이론과 실제
-전략은 전체의 일부다
-조사전략은 복잡계다
-어떤 전략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
-강공전략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과심죄 위험은?
-조사중 녹음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명칭이전전략, 총건전략, 매출액 1%전략, 음소전략
-초반, 중반, 중반의 전략은 다르다.
-상황에 따른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세무공무원에 따른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시기에 따른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2. 법 해석이 애매한 경우의 전략
-사전 답변 제도
-과세사실판단 자문, 과세기준자문, 조사심의팀
-불복시 세무공무원의 불이익 5가지
-불패소시 복결과 원인분석 제도
-불복 및 소송 패소율, 승소장려금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법해석을 잠꼴한 경우의 대처방법
-법해석을 유리하게 잘못하고 유권해석을 변경한 경우(신의 성실원칙)
-오래동안 과세를 해야하는데 비과세하다가 과세를 하는 경우(비과세관행)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의 개념
-조세회피행위를 인정한 경우, 부인 한 경우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3. 말도 안되는 억울한 세금 부과시 전략
-4가지 실제 사례
-법리와 구체적 타당성의 갈등(문리해석과 합목적적 해석)
-위헌 법규에 대한 법원의 구제 방법
-억울한 세금에 대한 대처방법
4. 리베이트나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의 대처전략
-사례 연구
-리베이트의 배임수재죄 여부, 감사원감사 조치
-대처방법

5. 공무원실적주의 대처 전략
-추징실적이 고과에 반영되는 점수는
-미국, 스웨덴 사례
-딜에 임하는 전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대응전략 3가지
6. 태도가 나쁜 공무원을 만났을 때 대처방법은?
7. 세무조사 잘 받는 팁
-시간의 나의 편이다
-소명의 언제하는 것이 좋은가?
-과다납부한 세금을 찾아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경비는 이렇게 해라
-감사원에서 적발될수 있는 것과 아닌 것 구분
-문서를 미리 만들어 두라
-사회통념으로 설득
-공무원이 봐 줄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여러명을 동시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싫어하는 이유
-기타 TIP

■ 탈세포상금 이론과 실제

1. 탈세포상금제도의 내용
가. 탈세제보로 인한 세무조사 건수
나. 탈세제보관리규정 내용
다.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2. 탈세제보 세무조사
가. 탈세제보 이한 조사통지서 샘플
나. 탈세제보접수후 업무 프로세스
3. 탈세제보 세무조사 법적인 대처방법
가. 세무조사 선정사유 없이 한 세무조사 위법으로 조사 중지 요청
나. 중복세무조사 금지 사례
4. 탈세제보 누가 왜 하는가
직원, 동업자, 거래처, 지인, 경쟁업체, 임차인, 친인척, 사기 피해자,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세파라치 사례
5. 탈세제보 대처전략
-전략1: 추징세액을 제보건으로 제한
-전략2: 탈세제보 제보가 나쁜 제도임을 어필
-전략3(장기): 탈세포상금 제도 폐지
6. 탈세포상금의 역사
7. 탈세포상금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세무조사 리스크를 방지하는 5가지 방법

1. 리스크 증대요인
2. 단기 대책
-로비, 새로운 지식 공급
3. 장기대책
-불합리한 세법 개정
-복잡한 세법 개정
-국세행정 개혁

■ 금융거래 조사

1. 금융실명법의 금융조사
2. FIU의 금융조사

‘조세판례 동영상’ 목차

‘조세판례 동영상’ 목차

■ 조세회피행위부인의 법리와 실질과세의 원칙

1.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의 구분
2.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회피행위의 규제 법리
3. 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관계
4. 실질과세의 2가지 설
 - 법적 실질설과 경제적 실질설
5. 사례
 - 1) 과세관청의 실질과세 주장
 - (1) 2012.1.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
 - 간주취득세 사건
 - (2) 전원합의체 판결이후에 실질과세적용을 부인한 사례(납세자 승소)
 - 외국 모회사, 중간 지주회사 등 다단계 거래를 통해 국내 계열회사를 지원한 경우
 - 유리한 조세조약국을 이용해 주식양도를 비교세 받은 경우
 - 헝가리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비교세 받은 경우
 - 여러 단계를 거쳐 결과가 이익이 발생해도 조세회피목적 이 없고 다른 이유가 있는 이유(전환사채를 조기에 상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이 생긴 경우)
 - 고금리로 차입한후 은행에 예금, 은행이 특수관계법인에 대출한 경우
 - 1층에서 소고기 판매 후 2층에서 조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 특수관계 아닌자와 거래로 특수관계 있는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 (3) 전원합의체 판결이전에 실질과세적용을 부인한 사례(납세자 승소)
 - 현대그룹 세무조사사례
 - 엔화 선물환매도차익이 이자소득인지 여부
 - (4)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인정한 사례(납세자 패소)
 - 양도세 회피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과소 기재한 경우
 -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채권양도후 처분손실을 손비처리한 경우
 - 즉시연금의 평가를 할인율이 아닌 납입보험료로 한 경우
 - 대표이사에게 과도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을 부인
 - 최진실사례
 - 배용준 사례
 - 2) 납세자의 실질과세 원칙의 주장
 - 귀속의 명의를 원고 법인이지만 독립채산체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과된자료 매출누락을 취소한 경우
6. 이혼행위와 실질과세의 원칙
 - 양도세 1세대 1주택사례
 - 증여세 사례

■ 상식에 어긋나는 세금, 법원의 구제방법

1. 위헌 법규에 대한 법원의 구제방법
 - 1) 시행령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결손법인이 채권포기이익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 여전히 결손법인인데 이익이 계산
 - 2005년 3억7천만원 아파트가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종과
 - 2) 시행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이 비용을 제한하여 무효로 판결한 사례
 - 3) 입법취지에 따라 시행령을 축소 해석한 사례
 - 배당 가능이익이 없는데 배당이익 계산
2. 법 해석을 통한 억울한 세금의 구제

- 1) 문리해석과 합목적적 해석 비교
- 2) 합목적적 해석을 한 사례
 - (1) 합목적적 해석을 한 사례
 - 경매취득부동산이 개인간 유상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경
 - (2) 합목적적 해석을 하여 납세자가 승소한 경우
 - ①구체적인 사례에서 매우 부당한 경우
 - 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했지만 훈장은 고사하고 세금폭탄
 - 몰수나 추징되어 불법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
 - ②중과세 입법취지에 따라 합목적적 해석을 한 경우
 - 이사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세종과 x
 - 책임지을 수 없는 장애사유로 용도변경을 못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종과 x
 - 스웨덴 사례
 - ③손금불산입 임야를 법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임야를 제외하여 해석
 - ④세법대로 해석하면 위헌적인 상황이 되어 합헌적인 해석을 한 경우
 -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 양도세 종과x
- 3) 엄격해석을 한 사례
 - 제한적인 규정을 엄격해석하여 납세자가 패소한 사례
 - 감면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납세자가 패소한 사례
 - 엄격해석하여 납세자가 승소한 사례
- 4) 엄격해석으로 패소하였으나 위헌결정으로 승소한 경우
 - 혼인으로 3주택인 된 경우

■ 신의성실의 원칙

1. 민법과 국세기본법의 내용
 -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개념
 - 2) 민법 판례
 - 부동산 경매 취득과 신의칙
 - 통상임금과 신의칙
 - 세무사 성공보수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경우
 - 3) 국세기본법상 신의칙
2.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 1) 신의칙 적용 4가지 요건
 - 2) 신의칙을 적용을 긍정하여 승소한 사례
 - (1)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승소
 - 보건사회부장관의 취약지병원 설립공고상 세금감면을 받고 병원을 설립한 경우
 - 구청장지시에 의한 총무과 직원의 취득세 비과세 약속
 - 공적인 견해표명을 담당 세무공무원이 하지 않았는데 인정한 경우
 - 부가세 과세대상을 면세대상으로 잘못 세무지도 한 경우
 - 인근 사업자에게 면세대상이라고 회신하고 그 내용을 예규로 공개
 - 공적인 견해표명을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본 경우
 - 연체료가 부가세 과표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믿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는 잘못
 - (2)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 승소
 - 공무원 귀책으로 허위신고, 허위매출은 부인하지 않고 허위매입만 부인

‘조세판례 동영상’ 목차

-시청이 공사미착공지시해 놓고, 미착공을 이유로 종합합산 종과세

- 3) 신의칙을 적용을 부정하여 패소한 사례
 - 권한없는 기관의 비과세 표명은 공적인 표명이 아님
 - 세무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감면을 알아본 경우
 -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적인 쟁점을 빼고 질의한 경우
 -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표명인 경우
 -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
- 4) 신의칙은 부정하였지만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

- 3.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
 - 1) 신의칙 적용을 부정하여 승소한 경우
 -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증여가 아니라고 한 경우
 - 법령상 제한으로 토지를 법인명으로 명의신탁, 법인세취소소에서 명의신탁을 주장
 - 분식결산하고 법인세 소송에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 신고를 하고 매출누락 소득세 소송에서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 상속세 관할을 잘못신고하고 관할 위반을 주장
 - 2) 신의칙 적용을 부정하여 패소한 경우
 - 명의신탁탁부동산을 매입세액공제 받고 폐업때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매출세액 납부 거부를 주장
 -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지등기를 하고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 등기무효를 주장
 - 3) 민법상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건
 - 건물부분의 철거와 대지인도소송 민법판례 사례
 - 4) 신의칙중 권력남용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패소한 경우

■ 비과세관행

- 1. 비과세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 비교
- 2. 비과세관행의 적용 요건
- 3.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 4. 비과세관행을 인정하여 승소한 사례
 - 1)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은 사례
 - 2) 명시적인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영세율이라고 여러차례 질의회신, 기본통칙에 규정한 경우
 -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취득세 과표x 유권해석 장기간 유지
 - 비거주자가 1세대1주택 양도는 비과세라는 유사한 질의회신이 있음
 - 10년간 소득세신고 안내책자에 감면 된다고 잘못 기재
 - 3) 비과세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본 경우
 - 20년 이상 간호전문대학 부설 병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 x
 - 10년간 관세품목을 잘못 분류한 경우
 - 양도세 고급주택 면적계산시 발코니 면적은 제외한다는 비과세 관행 인정
 - 4) 명백한 입법실수로 인해 종과세하지 않은 경우
 - 주택건설용토지를 6개월내 미사용시 종과세율을 적용하라는 법이 현실과 괴리되어 종과세하지 않음
- 5. 비과세관행의 소멸시점
- 6. 비과세관행을 부정하여 패소한 사례
- 7. 사례 연구

■ 불리하게 세법개정시 신뢰보호 문제와 소급과세

- 1. 신뢰보호 원칙의 개념
- 2. 신뢰보호 원칙의 위헌판단 기준
- 3. 세감면 약속 축소.폐지시 위한 판단의 3가지 기준
 - 위헌 결정 사례
 - 주택임대사업자 세혜택 폐지 사례 위헌 검토
- 4.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 준비금 미사용잔액의 이자가산조항 신설시 구법에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신법 여부
 - 종과세요건인 법 위반이 법 개정전에 발생, 신법 적용 여부
- 5. 신뢰보호원칙을 부정한 헌재 사례
- 6. 신뢰보호원칙 대법원 사례
 - 1)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되었으나 구법이 적용된 경우
 - (1) 부칙에 특별규정이 있어 구법이 적용된 승소 사례
 -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구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 감면폐지·축소·요건 강화, 유예기간 단축 사례
 - 시행령에 경과규정이 없어 법률의 경과규정에 의해 신뢰를 보호한 경우
 - (2) 부칙에 특별규정이 없지만 있는 것과 유사하여 구법이 적용된 경우
 - 원인행위인 계약과 착공이 잔금지전에 이루어져 구법이 적용된 사례
 - 2) 불리하게 세법개정되었으나 신법이 적용된 사례
 - 법인세감면을 구체적인 기간으로 약속하지 않아 신뢰가 단순한 기대에 불과
 - 일정기간 등록세를 종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어 신뢰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함
 - 부칙에 특별규정이 있지만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없어 구법 적용을 부정
 - 3) 유리하게 법개정, 부칙해석과 관련된 사례
 - 유예기간이 3년→4년, 법개정시 3년 경과되어 4년 적용

■ 개정세법을 개정전 사안에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 1. 개정세법의 성격
 - 확인적 규정
 - 창설적 규정
- 2. 사례
 - 1) 개정세법을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 소급적용한 사례
 - (1) 세법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한 경우로 확인적인 규정으로 본 경우 (입법미비)
 - 상속재산 관리인의 상속세신고기한 불리한 세법개정 사례
 - 경정청구 사례
 - (2)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명백한 입법 실수로 판단하여 소급적용
 - 2) 개정세법을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 소급적용을 부인한 경우
 - (1) 주식가액 할증평가시 명의신탁주식을 제외하는 개정규정
 - (2) 제한적인 규정의 세법개정은 창설적으로 보아 소급적용 부인
 - (3)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신설되기 전에 적용될 수 있는가?
 - 조리란 무엇인가?
 - 헌재의 다수의견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유리하게 해석한 경우
 - (4)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

<특전> ‘로스쿨 판례강의’ 목차 (9시간, 12.31일까지 구매시 제공)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소송, 조세형사법 판례 강의입니다
 세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은 들어야 하는 강의.
 돈을 주고도 들을 수 없는 세법의 기초를 잡아주는 명강의입니다.
 강의평점 7점만점에 6.8점의 평가를 받은 그 강의를 무료로 드립니다

“꼼꼼한 준비, 성의 있는 태도, 잘 요약된 내용, 훌륭한 강의
 교수님의 강의 정말 좋았습니다(동영상 구매자 A씨)”

‘로스쿨 판례강의’ 목차

■ 국세기본법, 조세소송, 조세형사법 판례(4시간 34분)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가. 어느 연도의 세법을 적용해야 하나?(실체법, 절차법)
 - 나. 부과제척기간과 기산일
2. 계약의 해제와 조세채권
 - 가. 민법상 법정해제와 합의해제
 - 나. 계약해제와 양도소득세
 - 다. 계약해제와 법인세
 - 라. 계약해제와 부가가치세
 - 마, 계약해제와 취득세
 - 사. 증여해제시 증여세 납세의무
3. 행정소송
 - 가.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
 - 나.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 다. 총액주의, 쟁점주의
 - 라, 불가쟁력, 기속력
 - 마, 소송물, 처분사유의 변경, 입증책임
4. 무효와 취소의 구분(조세민사소송)
 - 가. 불복기한이 지난 후에도 환급이 가능한 무효(부당이익)
 - 나. 불복기한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취소사유
 - 라. 중대명백설
5. 부과권과 징수권
 - 가. 선행처분(부과처분)과 후행처분(압류)
 - 나. 부과처분의 하자가 압류처분에 승계되는 경우

6. 조세형사법
 -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요건
 - 나. 차명계좌, 명의위장
 - 다. 세무대리인, 직원의 공범 여부
 - 라. 조세포탈의 유형
7. 헌법소송
 - 가. 위헌결정시 환급의 범위
 - 나. 위헌 결정의 소급효

■ 법인세 및 소득세법 판례(4시간 3분)

1. 부당행위 계산부인
 - 가. 실질과세의 원칙
 - 나. 우회적인 거래와 부당행위
 - 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사례
 - 나. 고가매입, 저가 양도 사례 등
2. 소득처분과 소득금액 변동통지
 - 가. 대표자인정상여 등
 - 나. 대표자에 대한 구상권청구
 - 나. 소득처분과 회사의 원천징수의무
3. 원천징수의 법리
 - 가. 원천징수의무와 납세자의 법률관계
 - 나.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법률관계
4. 스톱옥션 사례
5. 소득세관련 일부 판례

<특전> ‘조세문제해결 사례집’ 목차

- ▶ 건설회사인 A사의 1994년부터 3년간 최고의 조세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한 실제 사례집으로 판례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됨
- ▶ 조세문제의 쟁점을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이 자문서와 불복이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
- ▶ 25년전의 사례지만 현재도 대부분이 유용한 내용임

‘조세문제해결 사례집’ 목차

■ 법인세법

1. 과세처분이 전액 취소된 상황에서 다른 쟁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①
2. 과세처분이 전액 취소된 상황에서 다른 쟁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②
3. 토지거래신고를 필하지 않고 토지를 취득, 양도에 따른 법률문제와 합의해제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 문제
4. 계열사 파견직원 대한 조세문제 검토의 건
5.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금입출금에 관한 세무조사에 관련한 질의의 건
6. 차입금 과다법인에 의한 규제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7. 임대상가의 매각에 따른 아파트와 상가의 원가배분방식 등에 관한 질의의 건
8. 하도업체의 부도로 시공사가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구상권과 조세문제①
9. 하도업체의 부도로 시공사가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구상권과 조세문제②
10. 지체상금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지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누구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1. 지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후 5월 소득세신고에 따른 주민세 환급주체에 관한 질의의 건.
12. ‘입주지체상금에 대해 75%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개정법의 적용 시점에 대하여
13. 분양대행사가 시행사 몰래 높은 금액으로 분양하고 착복한 경우에 시행사 익금산입 여부
14.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수토지의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되는지 여부
15. 부채비율 200%가 넘는 회사가 조경면허요건의 임야를 보유한 경우에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16. 상가부지를 연부취득하고 잔금전에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경우의 취득시기
17. 다른 법률에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1. 감액 확정된 공사기성금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의 건
2. 상가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 산정에 관한 질의의 건
3. 부지조성공사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의 건
4. 하도업체가 공사를 못한 경우에 선금금 반환청구시 부가세 반환청구 문제

5. 아파트 및 상가 건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배분에 관한 질의의 건
6. 매입세액 공동안분계산시 토지가액이 총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7.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과 과세되는 국민주택초과 아파트나 상가 공급간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한 질의의 건
8. 공동수급 회사의 대표회사가 공동수급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9.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납부세액 재계산규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10. 창호설치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면제 대상인지 여부

■ 기타

1. 상가 분양에 따른 세금문제등에 관한 질의의 건
2. 상가부지에 관한 00건설과의 건축도급거래에 따른 세무문제 ①
2. 상가부지에 관한 00건설과의 건축도급거래에 따른 세무문제 ②
4. 명의신탁토지의 소유권을 찾아 올 때 부동산실명제법과 조세문제 검토
5. 장기미등기 부동산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문제
6. 하도급 채무를 하도급업체의 조세채권과 다른 채권이 경합할 때 누구에게 하도급 대금을 주어야 하나?

■ 지방세법

1. 조경면허허용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4. 지방세법상 매매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공장부지의 취득시기 및 비업무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①
6. 공장부지의 취득시기 및 비업무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②
7.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8. 공사대금채권에 갈음하여 토지를 대물변제받는 경우의 조세문제에 관한 검토
9. 아파트 부대시설에 대한 종합토지세 관련 소송의 승소가능성에 관한 질의의 건
10. 단지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의 반환과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의 건

